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도래, 2030년 총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급변, 소위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대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 정

부는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을 만혼·비혼 추세 심화와 맞벌이 가구의 낮은 출산율로 진단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종전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위주의 접근에서 ‘청년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 제거’로 전환하고 일·가정양립의 문제도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문화 개선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은 보육, 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결혼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물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획이다. 또한,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약13.5만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확산 등 근로문화 개선, 아버지의 달 인센티브 확대 등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대체인력지원 확대, 건강보험 출산정보 연계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등 중소기업·비정규직 실천여건 조성 같은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8% 수준에서 2020년 37%, 2025년 45%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고 초등돌봄벼랑 해소를 위해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돌봄지원체계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 난임부부지원패키지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것을 3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우선, 무소득배우자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해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 하고, 가입연령 완화·주택가격 한도 폐지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대폭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제도화하고,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전체 병원 확대, 종합적 치매대책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의료·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고용 활성화, 60세 정년무화 안착, 전직지원 의무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 중·고령자 고용기반 확대,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체계 구축 등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용시스템 개선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사회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국방·교육 등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책 강화, 사회보험 및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마련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에는 3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협력이다. 프랑스, 스웨덴도 20~30년에 걸친 국가차원의 장기 투자와 전사회적 대응을 통해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 우리도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등 전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흔들림 없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달려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을 계기로 인구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